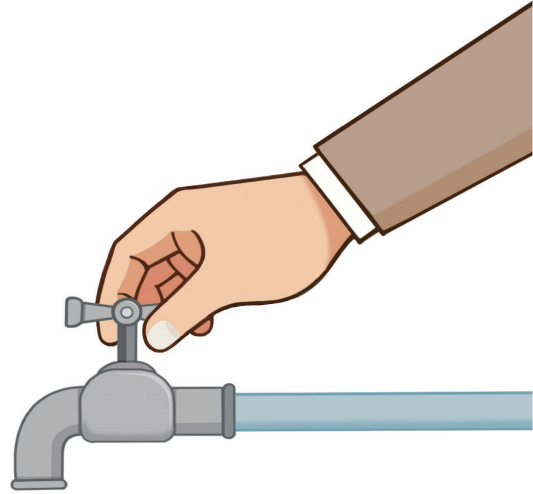


국민참여
예산낭비신고제도

건전한 나라살림,
국민이 참여할때
지켜집니다!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제도

세금은 줄이고 국가 경제를 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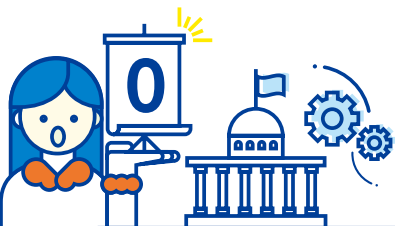


예산낭비 왜 생길까?

- 공무원의 사전 수요조사 소홀 등 예산 절약의식 부족
- 불필요한 사업 추진(유사 중복투자)
-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예산낭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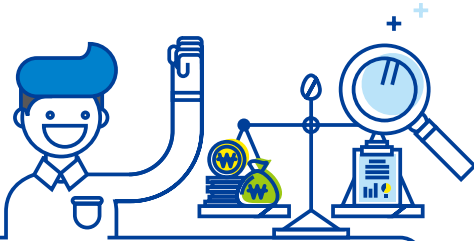
-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고 활성화
-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예산낭비사태에 대해 제도개선 노력 강화



예산낭비, 결국 국민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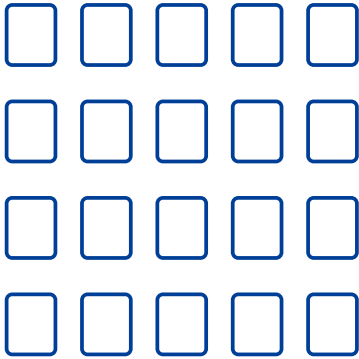
- 국민세금 부담 증가
-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어려워짐
- 국가에 대한 불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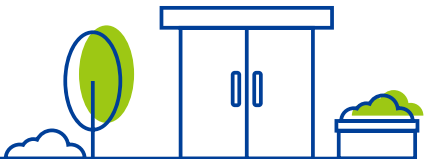
예산절감, 건전한 나라살림

-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선
- 정확한 수요예측 및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감시와 신고, 예산낭비는 NO!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예산낭비 감시와 참여 활성화
- 예산절감 제안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예산낭비신고로 소중한 세금 절약하기

예산낭비 신고제도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시정 요구(국가재정법 제100조)



세입여건 악화



저출산



고령화

→ 재정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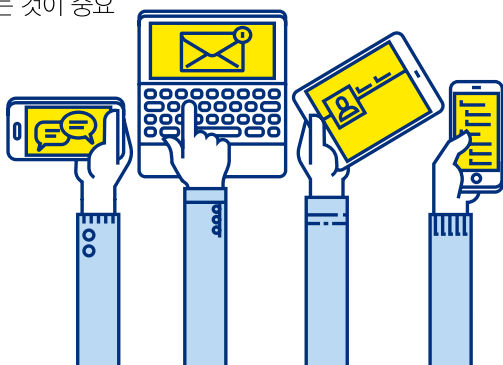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신고 필요

투명한 예산 운영, 국민 관심과 참여가 열쇠

예산낭비신고는 나라살림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자 국민의 권리

— 국가 예산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

— 예산낭비신고제도의 유용성을 알고 적극 활용



예산낭비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견 수렴
-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예산낭비신고센터, 전국 총 318개 설치



총 318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국민신문고에 연계
(40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8개 공기업 등)

예산낭비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 강화

예산낭비신고포털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신고 방법

Q 예산낭비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
-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으로 신고
- 전화(1577-1242) 또는 서신 신고



신속한 신고 처리와 인센티브

Q 예산낭비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관계 기관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여부 판단
- 신고인에게 30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1회 30일 연장 가능)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사업시행기관에 주의 및 시정 촉구



예산낭비
여부 판단



30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에
주의 및 시정 촉구

Q 예산낭비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던데 맞나요?

- 접수된 예산 낭비사례가 타당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20만원~600만원)을 7등급으로 심사해 지급
- 재정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최고 7천 8백만원) 지급 가능(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